

“30년 된 호남고속도 통행료 받지 말아야”

박기춘 의원 “고속도 9곳서 1조7천억 과다징수”

호남고속도로 등 30년 이상 됐거나 건설비를 100% 회수한 9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요금을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에 따르면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경부선 등 9개 고속도로는 도로 건설비용을 100% 회수했거나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조7천761억원의 통행료를 과다 징수했다.

경부·경인·울산 고속도로는 30년이 경과하면서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했고, 남해2 고속도로는 완공한 지 30년은 안됐지만 건설비용은 전액 회수했다. 또 호남·동해·남해1·호남지선·중부내륙 고속도로는 30년이 지났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는 그동안 12조 2천664억원의 수익을 내 건설비 5조 6천945억원과 유지비 5조2천194억

원을 제외한 1조3천525억원이 과다 징수됐다. 경인선은 2천783억원, 남해2지선은 799억원, 울산선은 654억원이 과다 징수돼 모두 1조7천761억원에 달했다.

박기춘 의원은 “이들 고속도로 통행료는 2개 이상 도로의 통행료를 통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채산제’가 적용돼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통합채산제를 폐지하고 도로를 건설한 지 30년이 경과됐거나 건설비용이 회수된 9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징수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최소한의 도로 유지비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해 매년 4월까지 도시순환고속도로 등 도시 근교 일부를 제외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전선 지중화율 전국 최하위

4.4% 불과, 미관 해치고 감전 위험...서울은 52.4%

진도·보성·함평 등 전남 기초단체 5곳, 1%도 안돼

부자 동네엔 전봇대가 없고 가난한 동네엔 수북 전봇대가 널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100개의 전봇대 중 불과 4개만이 지하에 묻혀 전선 지중화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경관을 크게 해치고 감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경기 화성)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 올해 7월말 전남지역은 4.4%에 그

쳤다. 이는 경북(4.2%)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서울(52.4%)보다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대전 46.7%, 부산 32.6%, 인천 30.8%, 광주 28.3%였다.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지중화율은 더욱 낮았다.

전남지역 기초단체 중 진도(0.43%), 보성(0.53%), 함평(0.85%), 강진(0.89%), 고흥(0.90%) 등 5곳은 1%에도 못미쳤고, 전국 하위 10위 가운데 전남지역이 3곳이나 포함됐다. 반면 목포(40.

3%), 영암(10.4%), 광양(9.8%), 여수(8.5%)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주는 서구 48.39%, 동구 38.87%, 북구 26.89%, 남구 10.65% 순이었다.

이같이 지역별로 전선 지중화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한전과 해당 지자체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잘사는 지자체는 전봇대가 사라지겠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도시 미관을 훼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에도 항상 노출돼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중화 사업을 시급하다”면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부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의원은 “전봇대의 지상 선로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에도 항상 노출돼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중화 사업을 시급하다”면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부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과 도시공사 등 광주시 5개 공기업 노사대표들이 12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시민 섬김 선언식’을 가진 뒤 봉사하는 노사문화정책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공기업 노사 “시민 섬김” 결의

광주시와 지방공기업 노사는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테크노파크 등 5개 공기업 노사는 12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시민 섬김 선언식’을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광주시와 노사는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노조는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시

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용자는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윤리경영에 온 힘을 다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광주시는 지역 공기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대 마야달력 2012년 12월 21일 끝

‘지구 종말론’ 확산 우려

‘마야 달력’이 끝나는 2012년을 불과 3년 앞두고 ‘지구종말론’이 확산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야 달력이란 기원전 3114년 마야인들이 만든 달력으로 2012년 12월 21

일까지 만들어져 있다. 이 때문에 종말론자 사이에서는 2012년이 지구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흘러 나왔다. /연합뉴스

계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2만5천800년만에 1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 등을 포함, 몇 가지 천문학적 우연이 2012년 겹치면서 종말론이 더욱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일례로 일부 천문학자들은 명왕성 궤도 바깥쪽인 카이퍼벨트에 있다는 가설의 미확인 행성 ‘플레닛 X’(제10행성)가 머지않아 지구에 근접하거나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시점 역시 2012년이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강진청자 제값 주고 싶다는데...



윤영기

정치부 기자

강진군이 턱없이 높은 가격에 고려 청자를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1주일 이 지났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한나라당 성운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진군이 지난 2007년 10억원에 구입한 ‘청자상감도문관공형 주자’의 시세는 자체 감정결과 8천만~9천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이 올해 구입한 10억원짜리 ‘청자상감 도관문 정병’ 역시 시세가 1억4천만~1억5천만원에 불과하다며 “바가지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제기한 문제를 핵심은 소장자와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통모(通謀)”해 감정가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군과 군립청자박물관은 해명자료와 기자회견에서 “소장자 등과 매입 협상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투명한 구입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있다면 감정평가위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10억원 청자 2건의 매입 과정에는 군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례가 적잖다. 군은 지난 2007년 청자 구입 당시 소장자와 친분이 있는 최고 박물관장에게 매입추진을 요구한 뒤, 그를 청자의 매입가를 매기는 감정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문가들은 군의 이같은 행정은 객관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구매자와 연관이 있는 인사를 객관성이 우선인 감정평가에 참여시킨 것은 삼식(通謀)이라고 본다.

또 올 6월 구입한 청자의 감정평가에 참여한 인사 3명 가운데 2명은 해당 청자의 소장자인 모 도자박물관에서 학예과장, 학예사로 근무, 소장자와 인연을 맺고 있는 전문가들이었다.

청자박물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에서 청자를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당자들을 감정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청자 매입을 추진했던 강진청자박물관은 지난 2007년 10억원에 구입했던 청자가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되는 등 거래실적이 있었는 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 성 의원의 주장대로 이 청자의 당시 낙찰가격이 1억2천만원이었던 것을 알았다면, 사전에 해당 청자의 가격을 재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강진청자박물관은 올해 청자 매입 과정에서 감정평가위원 3명이 10억원짜리 자기를 포함해 18개 유물에 대한 감정가를 똑같이 써낸 것으로 밝혀졌지만, “문제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수의 감정위원 평가액이 동일하게 나온 것은 청자유물 감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강진군이 국보급 청자를 확보하고, 청자축제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 것은 큰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협력을 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는 객관·타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강진군의 청자매입 행정에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 /penfoot@kwangju.co.kr

정부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회담 열자”

적십자 실무접촉도 제의

정부는 12일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현안 협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각각 북측에 제의했다.

천혜성 통일부 대변인은 “오는 14일 개성 남북경협협약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하자는 제의를 담은 대북 통지문을 관문점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에 전달했

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그동안 우리 측이 북측에 요구했던 것(황강댐 무단방류에 대한 공식 사과 및 방류 경위 설명)과 더불어 임진강 사고와 같은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적십자사는 같은 날 북한 조선 적십자사에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16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연합뉴스

시의회 내일부터 시정질문

北 미사일 2발 발사

광주시의회가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18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명자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도시관리계획(광주공원) 변경 결정안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 14~19일 상임위원으로 3명씩 모두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선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북한이 12일 오후 함북 무수단리 인근에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면서 “발사 장소는 함경북도 무수단리 이남 지역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동·서해안에 선박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연합뉴스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감동이 초도선물 인기!!!

전국 최저가 판매

평생이 다른 비데 전문가들이 전하는 실속 있는 오프도 선물.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NO-KA150
290,000원
219,000원 (부가세 포함)

비데프라자 | 062)515-1144

인디안 아울렛 새단장 OPEN

광주주월점

70~50%

정상·상설복합 매장

주월릉 빅마트

구매고객께 사은품 증정!

062)654-7205